

선거인단 대상·권리당원 적용 비율 등 막판 쟁점 조율

총선 1년 앞... 새정치 공천혁신단 13일 공천 료 확정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총선 1년 전 공천 료 조기 확정을 위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천혁신추진단(위원장 원혜영)은 지난 달 30일 전체회의를 가진 이후,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천 료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천혁신추진단은 6일에도 전체회의를 가진데 이어 9일 최종 회의를 갖고 총선 료에 대한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공천혁신위는 20대 총선 1년 전인 오는 13일 공천 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지난 2·8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선 후보자 심사기준 및 경선 방법을 선거일 1년 전에 조기 확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에도 총선 경선 방법은 국민 50% 이상과 권리당원 50%이하의 비율로 합산해 선출토록 당헌에 규정했으며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위원회로 신설 운영하고, 비율은 3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당 대표의 후보자 추천 규모를 축소했고, 순위 역시 당 대표 추천이 아닌 중앙위원회 투표로 확정토록 명시했다.

ARS·투표... 경선방식 이전

계파 갈등 조기 점화 가능성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수 많아

포괄적 공천 원칙 발표 그칠 듯

그동안 공천혁신추진단에서는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단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선거인단 대상과 여론수렴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 비율을 놓고 일괄 적용과 차등 적용론이 논란을 빚었으며 경선 방식을 놓고도 ARS 방식과 직접 투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선 불복자에 대한 경선 원천 배제와 탈당 전력자에 대한 10% 경선 점수 감점 원칙도 정했다.

하지만, 공천 료이 순산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공천 료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국회 정계

특위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총선을 앞두고 유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발표될 추진단의 공천혁신안에는 공천 시행세칙 등이 담긴 세부적인 료보다는 기본적인 포괄적인 공천 원칙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이 우선 큰 틀의 공천 료를 발표하고 시행세칙 등은 추후 논의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6일 전체회의에서도 공천 료에 대한 뚜렷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하지만 20대 총선 1년 전인 13일에는 포괄적인 총선 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3일 구체적인 총선 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선 시행 세칙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공천 료를 둘러싸고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당내 갈등이 조기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구체적인 공천 료가 제시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며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우남 해양수산위원장 “해역 조건 인양에 무리 없어”

유기준 장관 “비용 900억~2000억, 여론 수렴할 것”

세월호 인양 급물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발언으로 선체 인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여부를 두고 여론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차 언급했다.

또 관련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조속한 인양을 촉구, 정치권 대부분에서 일고 있는 인양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유기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중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한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TF) 작업이 끝나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이 있고, 유가족·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여론 수렴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양비용에 대해서는 “900억원~2000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기존 해

수부 방침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사 1주기(16일) 전에 기술검토 TF의 중간발표, 최종발표 등 그간의 검토 상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날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선체 주변의 해저 지형도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해저 선체의 상태와 주변 해역의 조건은 인양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태풍 변수를 제외하면 인근 해역의 유속과 기상 조건도 최소 연간 6개월 동안 하루 4~6시간은 양호한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5~6월과 9월 하순~10월 중순의 작업 환경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차원 고해상 탐사 결과, 세월호가 수심 약 44m 지점에 선체의 좌현이 해저면에 내려앉은 상태이며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하지만 선미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하면서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더 이상 선체 인양과 관련한 논란으로 갈등만 키울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선체 인양을 즉각 선언한 뒤 세부 인양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침사 1주년 주요 일지

▲ 2014. 4. 15 밤 9시=세월호 승무원 승객 등 476명(잠정) 태우고 인천항 출발.

▲ 2014. 4. 16 오전 8시 52분=단원고 2학년 최다하(사망)군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첫 신고, 오전 11시 35분, 첫 사망자 박지영씨 발견.

▲ 2014. 4. 18 오전 11시 50분=선수 부분까지 물에 잠겨 완전 침몰.

▲ 2014. 4. 19 오전 2시=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

▲ 2014. 5. 19=박 대통령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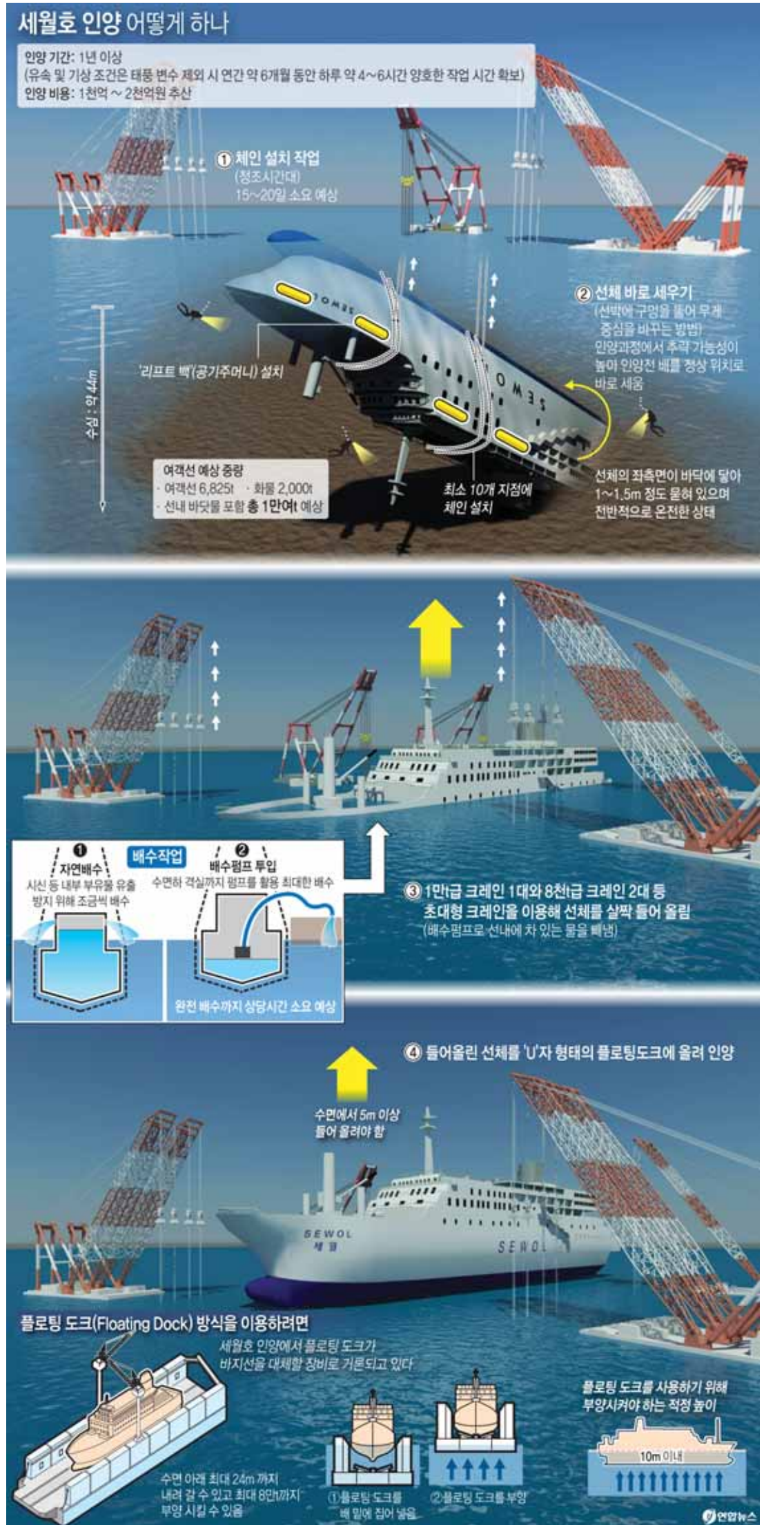
▲ 2014. 11. 7=침사 205일만에 세월호 3범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11. 19=세월호 3범 공포, 국민안 전자 출반.

▲ 2015. 1. 12=‘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2015. 4. 1=해양수산부,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착수 발표.

▲ 2015. 4. 6=박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검토 천명.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북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